

헌법집중(전정3판) 추록

P 113 B. C. 본문 내용 대체 (2022. 4. 주민투표법 개정_굵은 글씨 부분이 개정된 내용임)

B. 주민투표의 유형

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중요정책에 관한 주민투표(제7조)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(제7조 및 제8조)로 나뉜다. ① ‘**지방중요정책**에 관한 주민투표’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**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** 하고(동법 제7조 제1항), 투표결과와 **법적 구속력** 및 **주민투표소송**이 인정된다(동법 제24조 제5항·제6항, 제25조). ② ‘**국가정책**에 관한 주민투표’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·분합 또는 구역변경,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(동법 제8조 제1항), 투표결과와 **법적 구속력** 및 **주민투표소송**이 인정되지 않는 **단순한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**에 불과하다(동조 제4항).

C. 주민투표의 절차

① **18세 이상**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된 국민이나 일정한 영주의 외국인(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)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(주민투표법 제5조). 헌법재판소는 **법령상 주민등록이 곤란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부정**한 구 주민투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(2007.6.28. 2004헌마643). ② 주민투표의 실시유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한 경우,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(동법 제9조·제13조). ③ ‘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’와 달리 ‘지방중요정책에 관한 주민투표’의 경우,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**4분의 1 이상**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고(동법 제24조 제1항),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(동조 제5항) 및 그 사항을 2년 이내에 변경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며(동조 제6항 본문),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**선거관리위원회의** 소청을 거쳐 법원에 주민투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(동법 제25조). 헌법재판소는 **국가정책주민투표의 주민투표소송 배제**조항에 대하여 “지방중요정책주민투표와 국가정책주민투표는 그 대상의 성격, 전국적 통일성의 요부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”며 합헌결정하였다(2009.3.26. 2006헌마99).

P 178 판례박스 판례요지 수정 “(적극) ⇨ (소극)”

‘가구 내 고용활동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퇴직급여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

P 479 각주 105) 내용 수정 (2023. 3. 정부조직법 개정_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)
각주 106) 추가

105)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으로는 행정각부의 장을 겸한 **19명**의 국무위원이 있다(제26조 제1항 및 제2항).

106)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(1. 기획재정부 2. 교육부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. 외교부 5. 통일부 6. 법무부 7. 국방부 8. 행정안전부 9. **국가보훈부** 10. 문화체육관광부 11. 농림축산식품부 12. 산업통상자원부 13. 보건복지부 14. 환경부 15. 고용노동부 16. 여성가족부 17. 국토교통부 18. 해양수산부 19. 중소벤처기업부)를 둔다(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).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, **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**,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외교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(동조 제2항).